

TPP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

* 이 자료는 키무라 후쿠나리(木村福成) 게이오대학 교수와 우라다 슈지로(浦田秀次郎) 와세다대학 교수가 「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농업의 관세철폐 결단을(‘14.3.20), 세계 무역·투자의 침체 방지(‘14.3.21)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2국간 FTA중심에서 TPP를 비롯한 '메가 FTA(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)로 FTA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, WTO차선책으로서 메가 FTA의 위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, 국내 구조개혁과 글로벌 성장전략 차원에서 메가 FTA에의 참가필요성을 높여주고 있음
- 다만,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국제적인 룰 제정을 요구하는 만큼, 사전·사후적인 대응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참가를 위한 전제조건임

□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의 주요 골자

- TPP의 핵심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국제적인 룰을 제정하는 것임
 - 자유화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, 기존의 FTA에서는 불충분했던 서비스·투자의 자유화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
 - 국제적인 룰 제정은 지적재산권 보호, 정부조달, 경쟁정책, 분쟁해결 등에서 전례가 없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
- WTO기준의 정책규율과 비교하여, WTO룰을 더욱 강화·심화하는 WTO+, WTO에서는 커버되지 않는 정책모드를 다루는 WTO- 모두,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
 - 현재 21개 TPP교섭분야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
 - 신흥국·개도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향상되게 되면, 일본의 경제성장에도 직결

< TPP의 21개 교섭분야 >

WTO+ (WTO협정을 강화·심화한 분야)	WTO- (WTO에서 커버되지 않고 있는 분야)
- 상품시장 접근	- 정부조달
- 원산지규칙	- 지적재산권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원활화 - SPS(위생식물검역) - TBT(무역의 기술적 장애) - 무역구제(세이프가드) - 월경서비스무역 - 상용관계자의 이동 - 금융서비스 - 전기통신서비스 - 전자상거래 - 분쟁해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쟁정책 - 투자 - 환경 - 노동 - 제도적 사항 - 협력 - 분야 횡단적 사항
---	---

□ TPP와 여타 광역 FTA와의 관계

- TPP교섭이 타결되면 여타 메가 FTA의 교섭도 빨라지고 그 질도 향상됨
 - 이는 역으로 TPP교섭이 실패하면 여타 메가 FTA교섭도 실속할 가능성이 큼
 - 일본은 현재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, 한중일 FTA, 일본·EU FTA교섭도 병행추진하고 있어, 신흥국·개도국들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음
 - RCEP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,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
 - TPP교섭이 진전되게 되면 중국과 ASEAN 등도 RCEP 교섭에 더욱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됨
 - 메가 FTA 체결국간에는 ‘국제적인 룰 제정’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바, 이런 움직임을 둔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TPP의 조기타결이 매우 중요

□ 일본의 높은 TPP 지지율

- 일본 국민들의 TPP지지율은 높은 편임
 - 닛케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‘13.7월 시점에서 TPP참가에 대한 찬성이 반대를 상회, 10월에는 쌀 등 중요 5개 항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타당하다고 한 답변이 50%를 상회

- 실제로 일본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, 지방자치체, 나아가 노동조합도 일본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있음
- 실증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에 자회사를 늘린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일본 국내 고용도 증가시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□ TPP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

- TPP의 실현, 일본기업의 글로벌화 촉진, 공동화의 방지 등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성장전략의 중요한 기둥임
 - 저출산·고령화와 거액의 정부부채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TPP와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한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추진이 불가피
 - 미국 역시, TPP를 수출확대와 고용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 중

□ TPP의 경제적 효과

- 현재 TPP에 참가하고 있는 12개국의 GDP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%(‘12)이며, TPP가 FTAAP(아태자유무역지대)로 확대되면 58%로 늘어, 세계무역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
- TPP의 경제적 효과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, 이를 위한 정책변경이 약속대로 시행될 것인가, 그것이 가져다주는 정책 환경개선이나 특혜조치가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인가, 나아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 TPP의 보완대책이 어느 정도나 실현될 것인가를 보면서 최종 판단할 필요가 있음
 - 그러나 적어도 일단 체결되면 TPP가 국제통상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임에는 틀림없음
- 피터 페트리 미국 브랜다이즈대학 교수의 경제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의하면, TPP가 발효되는 경우 미국과 일본의 GDP가 각각 0.4% 및 2% 증가, 나아가 FTAAP가 발효되는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GDP가 각각 1.3% 및 4.3% 증가
 - TPP와 FTAAP가 발효되는 경우, 세계 GDP가 각각 0.2%, 1.9% 증가

□ TPP의 최대 장애물인 농업문제에 대한 해법

- 현재 TPP 합의에 최대 장애물은 미국은 자동차분야의 관세철폐, 일본은 농산물시장의 자유화 반대임
 - 일본은 쌀, 보리, 쇠고기·돼지고기, 유제품, 사탕 등 소위 5개 성역 품목의 자유화에 대한 저항이 강함
- 일본은 2013년 7월 교섭참가 이후, 농업부분에서도 건설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
 - 농업 대 제조업의 대립구조를 벗어나,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보호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익을 유지하려는 층과, 국제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층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
- 일본은 TPP와 병행하여 호주, 캐나다 등과의 2국간 FTA교섭도 추진하고 있으며 교섭 전술도 다양함
- 그러나 일본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, TPP를 타결시켜 높은 수준의 협정을 실현시키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직결
 - 농업부분의 개혁이 가속되기 위해서는 TPP와 여타 메가 FTA교섭이 선행되어야 함
- 일본이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, TPP의 타결가능성이 높아지고, 합의내용의 질 내지는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

□ TPP 합의에 필요한 97~98%의 자유화율에 대응해야

- TPP의 목표는 자유화율 100%이나 대다수의 교섭참가국들은 정치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100%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 - 일본을 제외한 TPP교섭참가국들이 이제까지 발효시킨 FTA의 자유화율이 98%인 점을 고려하면, 교섭합의를 위해서는 97~98%정도의 자유화가 필요
- 이는 발효 중인 FTA의 자유화율이 90%에도 미치지 않은 일본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임
 - 현재 TPP합의에 최대 장애물인 쌀, 보리, 쇠고기·돼지고기, 유제품, 사탕 등 소위

5개 영역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, 자유화율은 93.5%로 떨어짐

- 그러나 관세의 단계적인 철폐와 생산 감소 및 실업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 등의 정책으로 대응 가능함
 - TPP가 발효되더라도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철폐를 유예할 수 있음
 - 예를 들면, 유예기간 동안 생산성향상에 의해 수입품과의 경쟁이 상당정도 완화될 수 있음
 - 또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관세철폐의 대가로 국내 보조금을 증액할 수도 있음

□ 시사점

- 2국간 FTA중심에서 TPP를 비롯한 메가 FTA로 FTA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, WTO 차선책으로서 메가 FTA의 위치가 커지고 있는 점은, 국내 구조개혁과 글로벌 성장전략 차원에서 메가 FTA에의 참가필요성을 높여주고 있음
- 다만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‘국제적인 룰 제정’을 요구하는 만큼, 사전·사후적인 대응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참가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